

‘광주형 일자리’ 이대로 좌초? ... 청년들 한숨소리 들린다

사업 존폐여부 결정 D-2

대한민국 첫 ‘노(勞)·사(使)·민(民)·정(政)’ 상생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게 될 29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왔다. 이날은 현대차를 주축으로 한 주주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를 상대로 복귀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한 최후 통첩일이다.

앞선데 달린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주변 상황도 약재만 늘고 있다. 참다 못한 광주지역 시민

노사 신뢰회복이 최우선 ... 비전문 경영진 사퇴 전제로 노동계 복귀 이끌어내야

대한민국 노·사·민·정 상생 첫 사업 ... 정부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 갈등 조율

사회단체와 정치권, 경제계 등이 모두 나서 노사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 모두 ‘남의 일 대하듯’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속이 타는 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대규모 청년일자리를 염원하는 광주시와 광주시민 뿐이다. 지역사회에선 만약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 노동계 대표인 한

국노총과 사측인 현대차,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약속하고도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와 민주당까지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신뢰 회복이 우선-한뼘씩 양보하자 =광주형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가 지역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의 중재에도 사측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강한 불신 때문이다. 노동계 내부에선 지

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 이후 사실상 모든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노동계 인사들은 지난 2일 파기 선언식에서 “현대차와 단 한차례도 만남이 없었다. 공장을 짓고 인력을 뽑으면서 관련 정보조차 교류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한 행사에서 사진을 찍는 데만 동원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서 체결 이후 임원 선임과 자동차 공장 건설, 임금 결정 등 중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점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노동 이사제 도입, 노동자 임금 2배 내에서 임원진 임금책정, 비전문가인 박광태 대표와 현대차 출신 이사-광주시 퇴직 공무원 출신 본부장 경질 등 그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해 온 요구에 온 것 중 어느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점도 불신을 키

우는 요인이다.

특히 전 광주시장인 박광태 대표와 행정 공무원 출신 본부장 등은 시정 고위직 출신임을 내세워 1대 주주이자 조율자인 광주시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 노동계와의 갈등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광주시는 노동계의 ‘노동자 임금 2배 내에서 임원진 임금 책정’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은 되레 대표와 부사장 등 상임이사 2명의 최대 통합 연봉을 3억 8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노동계를 자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따라 박 대표 등 비전문 경영진 사퇴를 전제로, 노동계의 복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부터 생각하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내년 9월까지 대형 SUV차량 10만대 이상공장을 짓고, 첫 연봉 3500만원짜리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는 게 배대다. 직간접 신규 일자리까지

더하면 1만2000여개다.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는 지역 현실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다시는 찾아오기 힘든 기회인 것이다.

광주 13개 직업계고 교장단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책임 있는 어른들이 일자리를 기대하는 아이들을 실망하게 해선 안된다”고 호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에선 노사 갈등이 한계를 넘어선 만큼 정부와 민주당이 직접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지역 내 자체 해결되지 밝혀왔던 이용섭 시장도 결국 지난 23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의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자칫 현대차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 사업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광장에 ‘전두환 치욕 동상’ 27일 열리는 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26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전두환 치욕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오늘 광주법정에 선다

오후 2시 광주지법 대법정
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고(故)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9)씨가 27일 다시 광주의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 여 만이다. <관련기사 7면>

2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

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전씨의 출석은 지난 3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가 갱신, 인정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 있는 자’로 법정에서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전씨의 광주행이 확실하다는 분

석이나오기도 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전씨의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법원을 둘러싸고 오월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법원과 경찰은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7일 오전 8시부터 연희동 자택 앞에서는 전씨의 구속과 불법재판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탄력’ ... 국회, 오늘 2차 추경 심사

청 “5월 13일부터 지급 준비”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

철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부담했던 1조원 규모를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27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도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 심의를 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 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교통사고 줄이기!

광주시민이 모두 함께해요!

교통신호 지키기

음주/과속운전 하지 않기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